

충청권 환경협력 방안 모색

대전 충북 충남의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대전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이 참여하는 「충청지역혁신 대장정 2007」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8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청권이 하나 되는 충청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로확보를 위하여 충청권 환경협력 방안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지역의 환경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지역대학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 주제 충청권 수질오염총량관리 현황과 과제

김영일 / 충남 수질총량관리센터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기준유량인 저수량(Q275) 시점을 기준으로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목표 배출부하량을 산출하고, 안전을 고려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배경에는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

의 양적 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이용 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특별법 제정(한강 : 1999, 낙동강 등 3대강 : 2002)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하였다.

• 따라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메리트를 가진다. 첫째, 환경과 개발을 고려하여 유역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제고이고, 둘째, 광역·기초단체별, 오염자 책임(responsible)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셋째, 상하류 유역구성원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가 도모되며, 넷째, 과학적

(scientific) 바탕 위에서 수질을 관리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등 환경규제의 효율성(efficient) 향상되고 총량제 시행지역에 대한 건축면적 규제 등 합리적 조정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물관리 정책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유관 정책의 실질적 연계 관리를 통한 환경정책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질총량관리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충청권 3개 시도의 향후과제를 언급하였다.

- 먼저,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설치이다. 기존의 유동적인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수질총량관리제 연속성이 부족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의 한계에 직면하므로, 보다 지속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조직이 필요하다.

- 둘째, 수계기금 배분방식의 개선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위해 일정부분 수계기금을 활용(금강수계위원회 → 시·군)한다. 현행 수계기금 배분방법을 개선하여 금강수계위원회 → 시·도 → 시·군 또는 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 사용한다. 또한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하천모니터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용역의 조기수행을 통한 충분한 모니터링 자료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셋째, 공동협력을 통한 현행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법령, 방침,

기술지침)상에 문제점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지방연구원의 역할 증대이다.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 및 관리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계획 수립 및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다섯째, 국립환경과학원의 인력파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승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단위의 지자체에 국립환경과학원 파견인력을 배치하여, 승인절차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토론 및 답변

- 충남의 수질오염총량센터의 설치에 의해 충남지역은 전문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담당할 기관설립이 되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와 충북은 향후 예산확보 등의 문제점 극복과 함께 조기에 센터설립을 함에 의해, 지역의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확고한 위치부여가 필요하다.

- 기존의 수계기금 배분방식의 탈피가 필요하다. 현행 수계기금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진행이 요구시 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사업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및 관련성이 요구시 됨에 의해, 현재까지 진

행된 것과 같이 시도연구원이 중심연구원이 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는 과업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과업종료 후 수정보완이 매우 중요한 과제를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팀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제2주제 충청권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전성우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지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은 단순한 생물종 보전 중심이 아닌 자연생태체계 보전에 근간을 둔 국토환경 및 생태계 관리수단으로서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을 체계화하고 세부 추진전략 마련함에 있다.

- 여기에서 생태네트워크란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계시키는 국토의 생태적 구조를 의미한다. 그 공간 구성은 크게 핵심지역(Core), 완충지역(Buffer), 코리더(Corridor)로 구분한다.

- 생태네트워크의 유사개념으로는 연결형태에 따라 그린웨이코리더녹도는 선형(線形)구조, 비오톱서식처네트워크녹지(그린)네트워크 생태네트워크는 망형(網形)구조에 해당한다.

녹지축은 녹지흐름방향을 중시하므로 선형과 망형의 중간적 구조이다. 생물종 고려여부에 따라 그린웨이코리더녹도는 야생생물보다 인간정주공간의 쾌적성과 매력성 증대에 기여하는 반면, 비오톱서식처네트워크는 생물종의 서식 및 이동공간 확보가 주 관심사이다. 연결대상에 따라 녹지(그린)네트워크 및 녹지축은 산림녹지, 비오톱서식처네트워크는 핵심서식처, 그린웨이 등은 하천녹지도로변 등 제한적이나 생태네트워크는 모든 생태거점을 고려하므로 가장 종합적이다. 국토도시계획 등 물리적계획과의 통합적 적용 가능성은? 그린웨이코리더녹도, 녹지축, 비오톱서식처네트워크, 생태네트워크 순서로 크다고 볼 수 있다.

- 생태네트워크 구축의 위협요인 및 대책으로 생태네트워크의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은 도로철도 등 선형 구조물로서 서식처 파편화 및 생물종 고립 심화이다. 도로/철도임도송변 전시설 등 선적요소, 골프장/스키장택지개발 매립/간척 등 면적요소가 주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생태계 단절 등 구조문제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번식, 천이 등 생태계 기능에 대한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협요인의 생태적 영향에 대한 정밀연구 및 실험을 통해 체계적인 복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 생태네트워크의 추진목표 및 미래상으로 생태계의 통합적 관리와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

여할 수 있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이다. 생태적 제반자료를 취합하여 도면화함으로써 국토의 생태환경 관리에 활용하며, 대국민 정보 서비스 및 생태인식 향상에 기여이다.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일반시민 등 파트너십 협력을 통해 생태네트워크의 유지관리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 생태네트워크의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로는 1단계 :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기반 조성단계이며, 2단계 : 생태네트워크 지도 작성 및 훼손지역 복원 단계이며, 3단계 : 생태네트워크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단계이다.

공통의 주제하에 세미나 혹은 포럼 등에 의한 쌍방향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 생태네트워크구축은 해당 권역 혹은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교환이 필요함에 의해, 3개시도의 연구원 혹은 해당 관련자의 정기적인 연구회 등을 통한 기초자료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토론 및 답변

- 국가생태네트워크 구축시 지역형 생태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노은지구, 대덕테크노밸리 등 개발수요가 매우 많아 난개발의 우려와 녹지축의 단절이 대전지역생태네트워크 구축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녹지축의 징검다리형 생태네트워크 조성보다는 개발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의 보완 혹은 연결과정에 대한 이해도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은 단순히 지역과 지역, 혹은 점과 점, 면과 면을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구축도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관련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집단이